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 위기

이철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짓누르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한 국가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패권주의적 야망에 세계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1세기도 처음부터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져 가고 있다. 힘을 강조하는 부시의 등장 이후, 미국의 안하무인식 행동과 패권주의적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역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 정책과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미국은 점차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세계의 '불량아', '초강패'가 되어 가고 있고, 평화로운 삶을 갈구하는 인류의 '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가 그동안 기울려온 노력과 성과들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렸다. 미국은 우방국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 MD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핵확산 방지조약 NPT와 전략 핵무기 감축협정 START 같은 핵군축 조약의 전략적 기반이 되는 요격미사일 제한 ABM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핵확산 방지와 핵무기 군축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가 수년간에 걸쳐 공동으로 합의한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를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전 세계를 핵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와 생물 무기 금지협약BWC 강화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했다. 미군만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상설 형사재판소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은 세계가 직면해 있는 모순과 인류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줬다. 9·11 테러는 미국의 업보이고 미국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화이다. 일방적인 '힘의 외교'와 패권주의가 불러온 반발이다.

미국은 테러 사건을 빌미로 아프간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고, 아프간에서는 9·11 테러의 희생자들보다도 더 많은 민간인들이 미군의 오폭 등으로 죽어갔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UN과 자신의 우방국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략해 점령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역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패권주의 전략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작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미국의 일방적 발표로 시작된 북한 핵 파문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패권주의 정책과 핵선제 공격 전략, MD 계획 등에 더 없이 좋은 명분이 되고 있다. 이라크전이 끝난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적이 필요하다. '북한 위협론'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계속 유지해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어떤 협상도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아프간과 이라크 침략은 미국 패권주의 전략의 일환

9·11 테러를 구실로 감행한 아프간 침략도 미국 패권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9·11 테러가 아니었더라도 당연히 아프간을 침략했을 것이다. 아프간 침략은 아프간이 지니고 있는 군사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아프간은 미국에게 군침이 도는 전략적 지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인도와 아랍국가들까지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아프간 침략을 통해 미국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 미군 기지를 확보해, 21세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잠재국으로 지목해온 중국의 동서 양쪽에 미군을 합법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아프간에 눈독을 들인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와도 관련 있다. 아프간은 21세기 마지막 에너지 보고인 카스피해 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운반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2040년이면 석유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석유의 고갈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카스피해 유전 개발이다. 이 지역에는 추정 매장량 2천 억 배럴 이상의 막대한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천연가스 매장량은 더욱 매력적이다. 카스피해 지역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37%에 해당하는 1,86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하다. 카스피해 연안국들이 내륙 국가이므로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중해 및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투르

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간을 경유해, 파키스탄에 이르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는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다. 연간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보장해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WMD 개발과 후세인의 독재를 구실 삼아 이라크를 침략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반전 여론과 동맹국들조차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어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는 이라크 침공은 유엔 헌장 위반이고 명백한 침략 행위이다. 부시 대통령이 힘없는 국가의 지도자였다면 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이라크 침략은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과 관련된 복합적인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우선 카스피해에 이어 이라크의 석유 장악이 목적이다. 세계 에너지원과 원유의 가격 통제력을 장악하는 것은 미국의 21세기 패권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공식적인 석유 매장량은 1,125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이나, 1980년대 이후 탐사를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매장량은 2천억 배럴 이상의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고품질을 자랑한다.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워 중동 지역을 친미 국가로 개편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패권주의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탈냉전 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21세기에도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봉쇄 정책이 21세기 미국 패권주의의 핵심

미국은 탈냉전 후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21세기에도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개입주의 정책이라는 명제아래 미국 대외 정책의 뚜렷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21세기 미국의 대외 정책 및 군사안보 정책이 이처럼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은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문서들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21세기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는 「조인트 비전 2020 Joint Vision 2020」과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 2001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핵태세 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 등이다.

미국의 국방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전략의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조인트 비전 2020」은 2020년 미국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적 이익을 누리면서 다양한 지역 문제에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개입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가치를 들고 있다. 둘째, 잠재 적국들이 세계적 상업적·산업적 기반에 접근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만한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임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잠재 적국들은 '비대칭적 접근 asymmetric approaches' 을 통해 미국의 능력 향상을 만회하려 할 것이며,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기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수단과 같은 '비대칭적 위협' 은 미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서 「QDR 2001」이 담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정책은 다음의 4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 국방 정책의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 기지를 포함한 전방 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 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시스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유럽과 대서양 쪽에 실려 있던 전략 중심 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21세기에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에 도전할 잠재적인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다. 미국은 아시아를 미국에 도전할 충분한 능력을 지닌 지역 국가들이 잠재한 지역으로 지목하면서, 아시아가 대규모 군사적 경쟁에 취약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벵갈만에서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 연안 East Asian Littoral’ 을 ‘도발 지역 challenging area’ 으로 지정하면서,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의 밀집도와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내 지원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중시 전략과 중국 봉쇄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다.

패권주의의 새로운 명분, ‘깡패 국가’ 와 ‘테러’

미국은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다. 미국이 그 명분으로 찾아낸 것이 이른바 ‘깡패 국가 rogue states’ 의 대량파괴무기로 부터의 위협과 ‘테러리즘’ 이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의 ‘선제 사용 전략’ 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2002년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 NPR」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해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 대상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7개국을 거명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 공격 전략은 2002년 9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냉전 시대 위협의 성격은 적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억지 deterrence’

를 미국에 요구해 왔지만,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의 종식에 따라 안보 환경이 큰 변환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통적인 억지 개념은 미국의 적들에 대처하는데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을 비롯한 '강대 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 행동 act preemptively' 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을 비롯해 비핵무기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전략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비핵무기 국가에 대해 약속해온 「소극적 안보보장 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NPT의 기본 전제와 원칙을 깨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이고 평화 파괴 행위이다.

이처럼 '강대 국가'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의 위협과 '반테러리즘 anti-terrorism'은 미국의 패권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구실과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 '반공주의'가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면, 탈냉전 시대 '반테러리즘'은 탈냉전으로 퇴색해버린 '반공주의'를 대신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패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어느 때든 '반테러리즘'을 구실로 군사적 행동을 일삼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세계 표준'과 '룰'을 전세계에 강요하면서, 미국의 비유에 맞지 않으면 '테러 단체'와 '테러 지원국'의 굴레를 씌울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과 이라크 침략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MD는 미국 패권주의 전략의 결정판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MD 계획은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의 결정판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 추진에 추동력을 제공하

고,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계획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이 바로「럼스펠드 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이다.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의 현재와 향후 위협의 성격과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성된「럼스펠드 위원회」는 대량파괴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전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럼스펠드 보고서」는 미국에 제기되는 미사일 위협으로서, 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 기술을 보유하려는 '지역 패권국의 야망을 지닌 국가들 counties with regional ambitions', 러시아로부터의 허가받지 않거나 우발적인 unauthorised or inadvertent 미사일 발사, 중국의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 보유와 수출을 통한 대외적 확산, 북한을 비롯해 이란·이라크·인도·파키스탄 등 '신생 탄도미사일 국가 emerging ballistic missile powers' 등을 들고 있다.

미국은 MD를 21세기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적 구성요소 key component 로 간주한다. 미국의 21세기 국방 전략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협에 대응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면에서 국제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MD는 그 핵심적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MD는 미사일 확산을 감소 내지 방지하고, 잠재적 침략자들이 탄도미사일을 활용하는 것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 안정을 강화하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이 MD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몇 가지 복합적인 목적과 배경을 지니고 있다. 첫째, MD 계획은 21세기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의 MD 계획에는 절대적인 핵 우위를 유지해 21세기에도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로 남겠다는 정치·군사적 오만과 야망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 ABM 조약 파기와 MD 계획의 추진은 미국이 절대적인 핵 패권을 장악하고 핵무기 선제 공격 능력을 독점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적인 핵 억지력 안정을 꾀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핵 강대국들 간의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MD 계획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은 21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에 도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최대 장점인 군사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특히 핵전력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선제 핵공격 능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MD 계획이 담고 있는 중국 견제 전략에는 중국과 군비 경쟁을 유발해, 중국이 경제력을 군사비에 소진케 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이건 시대에 대해 깊은 향수에 젖어 있는 공화당의 고위 인사들은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것은 당시 소련을 압박한 군비 경쟁 때문이었다고 믿고 있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군사비 지출을 한 것이 소련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층들은 똑같은 논리를 중국에도 적용하려고 있다. 미국이 MD 계획을 통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무리하게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21세기 중반에도 미국이 세계에서 독점적인 패권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셋째, MD 계획의 배경에는 군수산업체를 위해 새로운 무기 수요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MD 계획이 직접적으로는 공화당의 자금줄이자 지지 기반인 군수산업체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지상 NMD에 소요되는 비용만 600억 달러로 추산됐던 것을 고려하면, 해상과 공중을 포괄하는 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미국은 MD 계획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통신망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MD를 위해서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조기 경보위성망과 지상 레이더망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은 전세계의 정보통신망이 미국의 통제와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메일까지 포착하는 통신 도청 체제인 '에셀론 Echelon'을 능가하는 전 지구적 규모의 정보통신망을 장악하면 미국은 명실상부한 '빅브라더 Big Brother'가 될 것이다. 미국의 MD 계획과 관련해 서유럽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또한 미국의 MD 계획은 첨단 군사기술을 포함해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기회를 미국 산업체들에게 부여함으로써, 21세기에도 미국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동북아에 군비 경쟁 불러와

중국을 21세기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경쟁 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동북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적국으로 사실상 설정하고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김에 따라, 동북아가 미국의 세계 전략과 군사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자'로 선언했던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해 왔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일본 열도에서 한국을 거쳐 대만, 필리핀을 잇는 태평양 동부 연안의 '대중국 봉쇄선'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미국이 공산 진영의 확장을 봉쇄하기 위해 2차 대전 이후 구사했던 이른바 '봉쇄 정책 containment policy'를 연상케 한다. MD를 비롯해,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보여지는 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강조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런 동북아 정책은 동북아에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 양상이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정책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개발과 배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MD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신형 핵탄두 개발을 비롯해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의 추가 개발과 배치를 서두를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 고의적으로 군비 경쟁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미국의 군사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중국과 군비 경쟁 양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MD 계획에 따른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 예상된다. 미국은 동북아에 TMD 구성을 위해 이지스 함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추가 배치를 시도할 것이며, 일본과 한국을 지상 레이더 기지의 후보지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럼스펠드 독트린' 으로 불리는 신군사 정책의 군전력 개편 계획에 따라 신형 첨단 무기들의 유입과 배치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구조를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화된 신속 배치 전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장비가 첨단화되고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신병전 체제의 도래

중국을 사실상 제1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정책과 군사 전략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적·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996년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과 이어진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그리고 부수 법안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난 5월 15일 의회에서 유사 법제의 통과 등을 통해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에 주안점이 두어진 부시 행정부의 군사 정책에

따라 미·일 군사 동맹관계는 이전보다도 한 단계 격상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미 부시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일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관계를 미·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일 군사동맹관계 및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관련해 몇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법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일본헌법」 제 9조의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중 급유기와 경항공모함 제공 등 일본 군대의 '전력 투사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의 향상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를 폐기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주일 미군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억지하는 이른바 '병마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한편 미국의 중국 포위 정책과 미·일 군사동맹관계의 강화는 동북아를 '신냉전 체제'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며, 전문가들 속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정책은 정치군사적으로 동북아에 '신냉전 체제'의 도래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의 도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에서 '신양극 체제'를 재현케 하고, 패권 경쟁에 따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미·일 동맹 축과 중국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짜기가 이뤄지고, 이들 세력 간의 대립 구도로 인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둘째, '신냉전 체제'와 '신양극 체제'의 도래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과 전략의 폭을 좁히고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편가르기'와 '줄서기'에 강요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

셋째, '신냉전 체제'의 도래는 한반도 통일 환경의 악화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분단이 바로 냉전의 산물이고 냉전 체제가 과거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신냉전 체제'의 도래는 한반도 통일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동북아 질서가 다시 편가르기를 통해 양극 체제화하고 남북이 각기 어느 한 쪽의 군사동맹 체제에 더욱 견고히 편입된다면, 통일은 더 어려워지고 한반도는 분단 고착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미국이 몰고 온 한반도 핵 위기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물살을 탄 듯이 여겨졌던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한반도 냉전 해체 과정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반전됐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왔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비타협적인 태도가 가져온 결과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되던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결코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문제이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은 북한,' '강패 국가 북한,' '테러 지원국 북한,'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으로 북한이 남아 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패권주의 정책과 MD 계획, 핵무기 선제 공격 전략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16일,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북한 핵개발 시인' 발표로 시작된 북한 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미국의 '벼랑끝 물기'와 북한의 '벼랑끝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다. KEDO의 중유 공급 중단 결정과 북한의 핵시설 동결 조치의 해제 발표, NPT에서의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다. 4월 말 개최된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로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확실한 사실 확인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북한에 뒤집어 씌우고 막연히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식으로는 해법이 보일 수 없다.

이번 북한 핵 문제는 충분히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태가 극단의 상황으로까지 악화된 데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 미국은 의도적이라고 할만큼 북한 핵 파문을 악화일로로 몰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지도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의 미숙, 미국의 전략에 밀려든 무모한 맞대응도 사태 악화에 한 몫을 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북한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미국은 당초에 자신이 제기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계획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 시인'으로까지 몰고 가 '과거 핵'의 해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과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비타협적인 자세와 대북한 압박 정책은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다. 미국은 북한의 일방적 양보와 굴복만을 강요하면서, 군사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폐기' 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비타협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북한 핵 파문은 처음부터 우습게 시작됐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됐으나, 미국은 지금까지 증거는 고사하고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음모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부린 농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 아래 작심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비공식적인 북한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를 잡아 몰고 늘어지고

있는 꼴이다.

미국은 '북한 위협론' 유지가 필요

만약 이번 북한 핵 파문이 '미국발' 이라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 문제를 확대하면서 부풀리고 있는 미국의 의도는 다음 몇가지일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재장악할 목적이다. 미국의 '북한 핵개발 시인' 발표가 터진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끝만큼 대담하고, 북·일 대화가 예상 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데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타격을 주어 지난 연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친미 사대주의 정권의 등장을 돕고자 한 의도도 한 몫을 했다.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북·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일 수교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처럼 한반도에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속한 냉전 해체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큰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로 연결되고, 북·일 수교로 일본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냉전 해체는 시간 문제였다. 이것은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사건' 을 만들어 이 시점에서 발목을 잡지 않으면 안됐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 정책의 명분을 위해 '북한 위협론' 을 유지할 목적도 존재한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힘을 통한 강경 정책을 위해 '적' 이 필요하며, 북한은 이런 의도와 목적에 매우 적합한 존재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MD계획을 추진하

기 위한 명분에 제격이다. 이른바 '강패 국가들' 가운데서 미사일 개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봉쇄 정책의 핵심 요소인 미·일 동맹관계와 보조축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 체제의 지속이 필요하며, 그 주요한 명분은 일단 '북한 위협론'이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 간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주도 역시 부시 행정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남북 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NSA 파기가 북한 핵 문제의 본질

이번 북한 핵 문제의 배경에는 미국의 소극적 안보보장 NSA 위반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도 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어떤 국가가 핵무장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NPT 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핵무기 국가들이 해당 비핵무기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안보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NSA라고 하다. 1970년 NPT의 탄생과 1995년의 재연장 합의는 핵무기 국가와 비핵무기 국가들 간에 이런 약속과 전제에서 가능했다. 더구나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문」 제3조 1항에서, 북한에 대해 이 NSA를 문서로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NSA 약속을 정면으로 깬 것이다. 이것이 북한 핵 파문의 본질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국방부는 「핵태세 보고서」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보고서」에서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 대상 국가로 북한을 거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 핵 해법의 실마리를 푸는 방법이다. 결국 북한의 핵 포기과 미국의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미 굴욕 외교와 더 높아진 한반도 위기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오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평소 강조해 왔던 '당당한 외교'나 '대등한 한·미 관계'는 고사하고, 미국의 비위나 맞추는 친미 사대적인 발언과 민족의 이익과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대미 굴욕 외교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스스로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공동 성명의 내용은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실제로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노대통령 주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이번 방미의 결과와 공동 성명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를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립서비스에 놀아난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확답을 받고, 또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담 결과는 '추가적 조치'에 동의함으로써, 군사적 방법을 비롯해 미국의 강경 입장에 동조하고 이를 사실상 승인하고 말았다.

게다가 3차 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5차 회담 틀에 동의해줌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주도에 끌려 다니게 됐다. 미국이 일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일 관

계의 진전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미국은 작년 고이즈미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급속히 진전되던 북·일 수교 협상에 크게 놀란 바 있다. 일본을 다자 회담 틀에 끌어들이고 북·일 수교를 북한 핵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제하고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또한 미국은 공동 성명에서 남북 교류를 북한 핵 문제와 연계시키는데 성공해, 남북관계마저 속도 조절과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교류의 병행추진 원칙을 포기하고 이 두가지를 연계시키기로 함에 따라, 북한 핵 협상과 남북관계에서의 역할과 발언권을 축소하고 스스로 손발을 묶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1993~4년의 북한 핵 사태 당시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북 강경론만을 고수하다, 결국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한 핵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미국에 끌려다니다가 경수로 비용만 부담하는 꼴이 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다시 한반도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북한의 핵 보유 시인 발언으로 북한의 핵 보유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 상황을 질질 끌고 가면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의 명분을 쌓으면서 동시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또 한·미 관계를 여전히 굴종과 불평등과 주종관계의 틀에 묶어 놓을 수 있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부시에게 코드를 맞추고 온 결과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공동성명의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

이철기 leecki@unitel.co.kr | 동국대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국제한민족재단 통일문제연구소장, KBS 객원해설위원.